



## 스포츠 분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체육시민연대”를 중심으로

### A Research Regarding the Rol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 for Healthy Sports Culture: A Case of the “Civic Network for Justice in Sport”

홍덕기 경상국립대학교 부교수 · 임용석\* 충북대학교 부교수

Hong, Deock Ki Gyeongsang National Univ. · Yim, Yong Suk Chungbuk National Univ.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한 스포츠 문화 정착을 위한 스포츠 분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살펴보고 시사점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일 사례연구 방법으로 스포츠 분야의 시민단체인 체육시민연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연구 방법은 2002년 창립부터 2021년까지 체육시민연대의 활동과 관련한 문헌분석과 10년 이상 체육시민연대 활동 경험에 있는 6명을 개별 면담했다. 자료분석은 체육시민연대의 연도별 주요활동에 대한 내용분석과 범주화 과정을 통해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체육시민연대 20년, 그 삶의 여정 따라가기’는 1) 체육시민연대의 창립과정, 2) 핵심사업(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 정부의 체육 정책 감시 및 견제), 3) 기획사업(체육대학 폭력문화 극복, 반전·반핵·평화 마라톤, ‘몸글몽글’ 글쓰기 과정), 4) 연대사업(국내·외 시민단체와 교류, 정부 기관과 거버넌스 구축), 5) 조직사업(사무국과 집행부 운영, 전문성 함양 및 홍보)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체육시민연대의 삶, 되짚어보기’는 1) 성과(스포츠 분야 이슈의 의제화, 연대와 거버넌스를 통한 대안 마련), 2) 한계(조직의 불안정성과 확장성 부족, 정보력 및 사업의 다양성 부족), 3) 향후 과제(조직의 지속가능성 개선, 전문성과 대중성의 조화, 견제와 거버넌스의 적절한 균형, 정치적 중립성 확보)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은 본 연구 결과가 갖는 의의와 후속 연구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했다.

주요어: 스포츠정책, 스포츠인권, 시민사회, 거버넌스, 체육시민연대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ol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 for healthy sports culture in South Korea. To do this, ‘Civic Network for Justice in Sport(CNJS)’ which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civil society organization in sport arena was analyzed as a case study. Specifically, the documents and mass media news regarding the CNJS during 2002-2021 were collected. In addition,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six research participants who have worked at the CNJS as key players over 10 year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ontent and domain analysis procedur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20 years of the CNJS, following the journey of life’ showed 1)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the CNJS, 2) the essential project, 3) the planning project, 4) the solidarity project, and 5) the organization project. Second, the ‘rediscovering the life journey of the CNJS’ showed 1) achievements, 2) limitations, and 3) future tasks.

Key words: Sports Policy, Human Rights in Sports, Civil Society, Governance, Civic Network for Justice in Sport

\* sportmania@cbnu.ac.kr

## 서론

한국 사회에서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정치적 민주화를 시작으로 각 분야의 민주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특히, 1991년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는 기존 학생운동 방식이나 운동노선의 변화를 요구했다. 1990년 전후의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시민사회 운동을 촉발했다(박순성, 김동준, 남부원, 박영선, 박정은, 조대엽, 김형종, 홍상만, 2014). 시민사회 운동의 결실로 탄생한 시민단체는 비정부기구의 하나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을 말한다(양현모, 2002). 시민단체의 대표적인 역할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정책 감시,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 교육 및 언론 활동을 통한 시민의식 향상 등이 있다.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를 들 수 있다(신율, 2001; 참여연대, 2014). 이들은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법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권력 감시를 통해 다양한 이슈와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으며 그 규모와 사회적 영향력을 키웠다(박순성 외, 2014). 한국 사회는 현재 약 2만여 개의 시민단체가 등록되어 환경, 여성, 아동, 청소년, 소비자 주권, 인권, 통일, 국제구호,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김준기, 2006). 그동안 한국사회의 시민사회 운동 관련 선행연구는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의 특정 시민단체들이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노중기, 2015; 양기호, 2000; 양현모, 2002). 이는 특정 시민단체들이 역사, 조직규모, 그리고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측면에서 대표성을 띠기 때문으로 보인다.

1990년대부터 다양한 분야의 시민운동이 전개되었지만, 스포츠 분야의 시민운동은 21세기가 되어서야 시작됐다(안민석, 2002). 2000년 5월 장희진 수영선수 사건과 이에 따른 ‘체육개혁을 위한 전국 체육교수 서명운동’은 2002년 스포츠 분야 최초의 시민단체인

체육시민연대의 창립으로 이어졌다(Nam, Hong, Marshall, & Hong, 2018; Lim, Love, & Lim, 2015). 스포츠 분야의 시민사회 운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김민, 서희진, 2021; 김병출, 서재철, 2019; 남상우, 2014; 안민석, 2002; 안민석, 임현진, 정홍의, 박홍규, 2001). 이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관계나 스포츠 거버넌스 구축, 시민성 교육, 국가주의 스포츠의 한계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시민사회의 주체를 스포츠클럽, 경기 단체, 시도체육회, 언론, 학술단체 등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스포츠 조직의 견제와 균형에 대한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한국 사회 스포츠 분야의 시민단체에 대해 활동가의 입장이나 인권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들은 일부 존재하지만, 시민단체의 역할과 의의에 대해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박효정, 최승훈, 2006; 이경렬, 2020; 홍덕기, 2017; Nam et al., 2018).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은 사회적으로 더욱 중요해지는 추세이다. 시민단체가 단순한 정부의 정책 비판이나 서비스 기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 여론조성 등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스포츠 분야 시민단체의 역할 및 의의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스포츠 분야 시민단체의 역할,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시사점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판적 공공사회학(critical public sociology)적 관점을 이론적 자원으로 삼았다(Burawoy, 2005; Dillon, 2014). 이러한 관점은 연구자들이 사회 현상을 권리관계의 틀 속에서 분석하고 이를 문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정의와 불평등, 인권에 기반하여 현장의 지배적인 담론을 해체하고 변화시키는 노력을 내포한다(Burawoy, 2005). 즉,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고 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 또한 비판적 연구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로 보는 것이다(Thayer-Bacon, 2008). 한국 사회의 스포츠 분야 시민운동이 시작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비판적 공공사회학 관점으로 시민단체의 역

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50년 이상 지속된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엘리트스포츠 담론이 가져온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민사회단체의 부단한 노력은 사회참여를 통한 현실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Nussbaum, 1992). 본 연구를 통해 스포츠 분야 시민운동의 성과와 한계가 학술적으로 공유되고 건강한 스포츠 문화의 정착을 위한 시민사회 운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스포츠 분야에서 활동 중인 시민단체를 사례로 선정하여 비판적 공공사회학의 관점에서 스포츠 분야 시민단체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 시도다. 비판적 공공사회학 관점은 기존 한국 사회의 엘리트스포츠 중심 패러다임으로 대표되는 지배적인 담론을 해체하고 스포츠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사회·문화적 부조리와 현실을 고발하려는 체육시민연대 활동 맥락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됐다. 예를 들어, 언론을 통해 드러난 스포츠 폭력문화 속 위계 질서와 폐쇄적 구조 등 한국 스포츠계의 기형적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체육시민연대의 활동(기자회견, 성명서, 논평, 일인시위 등)을 당시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권력관계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불공정한 상황을 대변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려는 활동은 스포츠가 내재한 공공적 가치의 회복적 차원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방법은 연구대상의 희소성을 고려해 단일 사례 방법을 적용했다(Yin, 2014). 단일 사례연구 대상으로는 체육시민연대를 선정했다. 체육시민연대는 스포츠 분야 최초의 시민단체로 2002년 창립한 이후 현재까지 비영리민간단체로 운영되고 있다. 20년 동안 한국 스포츠 분야의 이슈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건전한 체육문화 정착을 위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사례라고 판단했다.

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개별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첫째, 문헌분석은 체육시민연대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동안 발표한 성명서, 기자회견문, 논평, 공문발송, 시민사회 연대활동, 각종 토론회 자료, 정기총회 자료, 집행위원회 회의록, 회원의 날, 후원의 밤 자료 등 창립 이후 지금까지 생성된 자료(핵심사업, 회원사업, 기획사업, 조직사업 관련 자료와 정관 등)를 수집했다. 더불어 한국 사회 시민운동의 역할 및 성과와 과제를 분석한 책, 학술논문, 기고문, 언론 기사 등을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둘째, 개별 면담은 총 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구체적인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은 10년 이상 체육시민연대에서 핵심적인 활동을 한 사람들(집행부 출신 5명, 회원 1명)을 대상으로 했다.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체육시민연대의 활동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연구참여자의 체육시민연대 집행부 활동 시기를 고려해 연구참여자를 선정했다. 또한, 10년 이상 순수 회원으로 참여한 연구참여자를 한 명 선정해 일반회원의 관점에서 체육시민연대 활동을 이해하고자 했다. 주요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들과 10년 이상 체육시민연대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한 라포가 형성되어 있었고, 체육시민연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공유하고 있었다. 개별 면담은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자 두 명이 함께 면담을 진행했다.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이름	직업	체육시민연대 주요경력	활동기간
N	교수	1기 운영위원장, 2-3기 공동대표	2002-2015년
R	교수	2기 집행위원장, 3기 공동대표	2005-2018년
M	교수	3기 사무총장, 4기 공동대표	2002-2018년
H	교수	3기 집행위원장, 5기 공동대표	2005-현재
J	교수	4기 집행위원장	2011-현재
S	연구원	회원	2006-현재

면담은 대부분 대면 방식으로 체육시민연대 사무실이나 연구실 등에서 진행했다.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실시간 줌(zoom)프로그램을 활용해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시간은 각각 2~3시간 정도로 1회씩 이루어졌으며 면담 내용은 녹취했다. 질문은 체육시민연대의 주요활동 타임라인을 바탕으로 연도별 주요 사건 및 활동에 대한 회상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모든 면담 전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진을 비롯한 담당자와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모든 면담은 1주일 내 전사를 원칙으로 했다.

자료분석은 첫째, 문헌분석의 경우 수집된 자료를 연도별로 정리한 후, 타임라인별 주요활동과 언론 기사를 교차분석하여 시간의 흐름 순으로 주요 사건별 문서를 재작성했다. 이후, 연구자 두 명이 각자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최종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둘째, 면담자료 분석의 경우 연구자 두 명이 각자 여러 차례 전사 자료를 읽은 후 주요 내용에 초기 코딩을 부여했다. 이후, 각자 부여한 초기 코딩을 비교·

대조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토론을 통해 상호합의된 상위범주, 중범주, 하위범주 및 범주별 개념을 도출했다(표 2참고).

연구의 진실성을 위해 첫째, 시간이 오래 지나거나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당시의 언론 기사 검색 등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하여 교차검증했고, 당시 활동했던 연구참여자에게 추가 질문을 통해 자료의 진실성을 높이고자 했다. 둘째, 자료 분석 시 주관적 편견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노력했으며 전문가협의, 동료간 협의를 통해 연구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검토와 조언을 받았다.

## 체육시민연대 20년, 그 삶의 여정

### 따라가기

‘체육시민연대 20년, 그 삶의 여정 따라가기’는 체

표 2. 범주분석 및 개념 예시

상위범주	중범주	하위범주	개념
체육시민연대 20년, 그 삶의 여정 따라가기	핵심사업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학습권, 학생선수, 학업결손, 최저학력제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	폭력, 성폭력, 스포츠인권
		정부의 체육 정책 감시 및 견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기획사업	체육대학 폭력문화 근절	체육과 신입생 길들이기, 위계질서, 열차려
		반전·반핵·평화 마라톤	스포츠 평화, 신일본 스포츠연맹
		‘몸글몽글’ 글쓰기 과정	논리적 글쓰기, 시민 활동가 양성
	연대사업	국내·외 시민단체와 교류	동대문운동장, 평창동계올림픽, 스포츠 미투
		정부 기관과 거버넌스 구축	국가인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조직사업	사무국과 집행부 운영	공동대표, 집행위원회, 사무국, 회비
		전문성 함양 및 홍보	전문가 포럼, 대안 마련, 소식지, 회원의 날
		스포츠 분야 이슈의 의제화	논평, 성명서, 기자회견, 일인시위
	성과	연대와 거버넌스를 통한 대안 마련	스포츠혁신위원회
		조직의 불안정성과 확장성 부족	활동가, 소수, 체육과 교수, 재정 불안정
		정보력 및 사업의 다양성 부족	모니터링, 뒷북, 궁정적 이슈 개발
		조직의 지속기능성 개선	노쇠화, 희생, 세대교체, 경제적 안정화
체육시민연대의 삶, 되짚어 보기	한계	전문성과 대중성의 조화	생활밀착형 과제, 국민인식
		견제와 거버넌스의 적절한 균형	엘리트스포츠 문제점, 정책 이행과정 점검
	향후과제	정치적 중립성 확보	이념 논리, 정치 조직화

육시민연대가 창립한 2002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20년간 체육시민연대의 활동을 분석했다. 먼저, 창립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초창기 활동을 탐색했다. 이후, 체육시민연대의 활동을 핵심사업, 기획사업, 연대사업, 조직사업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 1. 창립과정

체육시민연대의 창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일은 2000년 5월 발생한 장희진 수영선수 사건이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그녀는 중간고사 응시를 위해 태릉선수촌을 이탈해 학교에 갔다는 이유로 수영연맹으로부터 대표선수자격을 박탈당한다. 1년간 국가대표팀 및 상비군선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덤이었다. 이에 체육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학생선수의 학습권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임용석, 홍덕기, 2021; Lim, Love, & Lim, 2015; Nam et al., 2018).

그때 A 교수님이 앞장서서 체육과 교수 250여명에게 서명을 받았어요. 이전에는 체육계에서 무조건 단체 생활에 복종하고 개인의 자유가 제한받는 건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장희진 사건 이후로 어떤 선수 개인의 의견이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시각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해요(M 면담).

체육시민연대는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1년 10월 6일 올림픽파크텔에서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체육시민연대의 이름으로 2002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체육발전을 위한 체육시민연대 긴급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당시 체육시민연대 창립준비위원장이었던 B의 개회사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외침은 경직되고 단조로운 찌든 삶의 명에 를 벗는 여유로움입니다. 이어지는 우리의 외침은 남을 배려하는 선의의 경쟁과 화목의장을 마련하는 설득력입니다. 이러한 외침은 만인의 스포츠 세상을 열어갈 체육을 사랑하는 시민의 함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체육시민연대는 한국체육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 “절름발이 한국체육, 비틀거리는 체육계를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수 있을까?”를 펼쳐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체육시민연대 창립총회 자료집, 2002).

두 번의 연속 토론회는 ‘김운용 사퇴를 계기로 본 한국 체육계 지도자의 현실과 문제점’, ‘대한체육회가맹단체장들의 구성현황과 바람직한 단체장의 위상’, ‘한국 체육체제의 변천사를 통한 체육단체의 올바른 대안 모색’, ‘한국 체육시스템의 개혁과 대안’ 등을 주제로 체육계 현안에 대해 체육과 교수,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사무총장, 시도체육회 사무처장, 언론인, 교사,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사무국장,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열린 토론이었다. 특히 안민석 (2002)은 ①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 ② 엘리트스포츠를 통한 국민통합, ③ 스포츠를 통한 체제 우월성 입증, ④ 경기실적을 중심으로 한 업적 위주의 정책 등의 기제를 엘리트 중심 한국 스포츠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안으로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민간수준에서의 개혁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체육시민연대는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공동대표로 B, C, D 3명을 위촉하고, A를 집행위원장으로 1기 집행부<sup>1)</sup>를 꾸려서 2002년 5월 총 393명의 창립회원으로 출범했다.

공동대표는 교수, 교사, 엘리트 지도자라는 나름 직군별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을 공동대표로 선임했어. 그래서 대학교수를 대표하는 역할로 C 교수님, 체육교사를 대표하는 역할로 B 교장 선생님, 엘리트스포츠 지도자의 상징으로 D 대표가 합류하게 됐지. 그때 기획은 A 집행위원장과 E 사무국장이 했고(R 면담).

초창기 체육시민연대의 구성원은 나름대로 직군을 대표하는 시민들로 선정해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초창기 발기인대회와 정식회원으로 참여한 사람을 살펴보면 언론인, 체육 교사, 생활스포츠 동호

1) 체육시민연대의 집행부는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사무국으로 운영됐다. 집행부의 시기 구분은 공동대표와 집행위원회의 임기를 고려해서 이들의 역할이 크게 변화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집행부를 1기(2002-2004), 2기(2005-2009), 3기(2011-2015), 4기(2016-2020), 5기(2021-현재)로 구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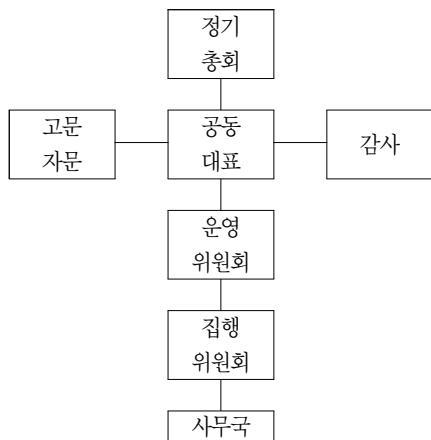


그림 1. 2002년 체육시민연대 조직도(체육시민연대 창립총회 자료집, 2002)

인, 엘리트스포츠 지도자, 의사, 법조인 등 다양했다. 당시 체육시민연대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하지만, 체육시민연대의 창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1기 집행부의 A 집행위원장과 E 사무국장이 1년 남짓 체육시민연대 활동을 끝으로 각각 국회의원과 보좌관으로 국회에 진출하면서 체육시민연대의 공백이 발생한다(Lim, Love, & Lim, 2015).

A가 체육시민연대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정치한다고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시대적 상황이 맞은 거지. 그 당시 체육계에 그런 사람이 필요 했으니까(N 면담).

이러한 공백과 더불어 초대 공동대표 중 B와 C 두 공동대표의 활동이 뜯해지면서 G 교수와 N 교수를 새로운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R 집행위원장, F 사무국장을 새롭게 영입하면서 2005년부터 2기 집행부가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후의 체육시민연대 활동은 핵심사업, 기획사업, 연대사업, 조직사업으로 구분해 제시하고자 한다.

## 2. 핵심사업

체육시민연대의 핵심사업은 첫째,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둘째, 스포츠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 셋째,

정부의 체육 정책 감시 및 견제로 나타났다.

### 1)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체육시민연대를 대표하는 핵심사업 중 하나는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의 정립이다. 장희진 선수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학생선수의 학습권 문제는 2003년 3월 벌어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사건으로 인해 한국의 엘리트스포츠 체계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를 불러왔다(강신복, 2003).

천안초등학교 아이들의 사망은 소위 말하는 한국 엘리트스포츠의 체계와 구조가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지.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아파하고... 결국,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왜곡된 엘리트스포츠 시스템이 만들어낸 일종의 국가적인 사태라고 규정을 하게 된 것 같아(R 면담).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화재 사건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국민들이 상식 수준에서 생각할 때 이건 체육계가 잘못했다고 보는 거지. 그걸 감시하고 지적하는 것이 체육시민연대의 역할이고(N 면담).

이후 체육시민연대는 책임자 처벌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교육부와 문화관광부 앞에서 전개하며 한국 엘리트스포츠의 구조적 문제점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냈다.

공부하는 학생선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해요 첫째, 학생선수의 학업 결손이 누적되면서 일반학생들과 같은 평균 수준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초 지식, 상식, 관계를 만들 기회가 없어지는 게 문제이구요 둘째, 은퇴나 중도탈락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못하는 측면이 있죠(H 면담).

체육시민연대는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의 정립’을 위해 성명서, 언론 기고,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지속해서 전개했다. 2007년에는 전국체전이 열리는 현장에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합숙소 폐지’ 피켓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체육시민연대의 초기 활동들은 보수적인 스포츠 분야에서 보기에도 관례를 깨는 행

위로 여겨져서 엘리트스포츠 현장에서 동의를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의 정립’은 교육부의 학교체육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또한, 2007년 ‘학원체육정상화를 위한 국회 촉구결의안’, 2011년 ‘학교체육기본법 제정’,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등 성과로 이어진다(김현수, 박성주, 2020; 홍덕기, 2021).

## 2) 스포츠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로 대표되는 체육시민연대의 핵심사업은 폭력, 성폭력 등 스포츠 전반에 걸친 인권침해의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부분으로까지 확대됐다(홍덕기, 2021; 홍덕기, 류태호, 2007). 예를 들어, 폭력의 경우는 2004년 11월 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 선수 폭력 사건이 사회문제가 됐다. 이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쇼트트랙 국가대표선수 폭력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체육시민연대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강신숙, 2004). 또한, 2005년 한 프로배구 감독의 선수 폭력 사건에 대해 ‘체육계 폭력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릴레이 일인시위를 일주일간 진행했다. 성폭력의 경우는 2006년 여자프로농구 감독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기자회견과 릴레이 일인시위를 진행했고 감독의 사과 및 영구 제명을 이끌었다(안민석, 홍덕기, 2019; 임용석, 홍덕기, 2021).

그때 참 일인시위 많이 했지. 체육시민연대에서 스포츠 분야의 폭력과 성폭력에 대해 일인시위의 형태로 직접적인 목소리를 조직적으로 낸 것도 전례 없던 시도였고... 이 일로 체육시민연대가 언론에 많이 알려졌지(R 면담).

체육시민연대의 이러한 노력과 KBS에서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를 다룬 ‘스포츠와 성폭력에 대한 인권보고서’, ‘코트의 마피아’, ‘슬픈 금메달’ 등의 방송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스포츠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홍덕기, 2021).

국가인권위원회의 000 사무관이 스포츠 분야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것을 파악하고 아젠다(agenda)화시키면서 인권위 차원에서 스포츠 인권 문제를 다루게 되었지. 이게 계기가 되어 인권위에서 체육시민연대와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성해서 긴밀하게 활동한 것 같아(R 면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초등학교 학생선수 인권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2008년 ‘중·고등학교 학생선수’, 2009년 ‘중도탈락 학생선수’, 2010년 ‘대학교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선수의 인권 침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했다(임용석, 홍덕기, 2021). 또한, 2009년 ‘스포츠인권 정책포럼’의 발족을 통해 스포츠인권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사업으로 들여온다. ‘스포츠인권 정책포럼’의 공동대표는 G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 운영위원장은 R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이 맡았으며 포럼 운영위원에 50% 정도가 체육시민연대의 집행위원으로 꾸려지게 되면서 체육시민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거버넌스를 구축해 스포츠 인권 문제에 대응했다(정준영, 2009). 이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와 ‘스포츠인권헌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업도 정권이 바뀌면서 중단됐다(홍덕기, 2021).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자체가 대폭 줄면서 스포츠인권 사업도 축소되었지. 그러면서 거버넌스 관계가 와해됐지(R 면담).

스포츠 인권침해 문제는 스포츠 분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최근의 스포츠 미투사건 발생 전에는 밖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임용석, 홍덕기, 2021; 홍덕기, 2021). 따라서, 체육시민연대 사무국으로 피해 당사자가 직접 연락이 와서 상담하는 것 또한 체육시민연대의 주요 업무였다.

어떨 때는 전화기 들고 2시간씩 상담하고 했어요 또 법적인 게 문제가 될 때는 변호사랑 연결해서 상담도 했어요(H 면담).

### 3) 정부의 체육 정책 감시 및 견제

체육시민연대는 정부의 체육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을 지속해서 전개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故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인수위원회에 체육시민연대 이름으로 제출한 ‘체육개혁 10대 과제’가 있다(표 3 참고).

그때 대통령 후보를 대상으로 체육 정책 질의서를 보내고 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10대 과제도 체육시민연대에서 먼저 선점하고 한국사회의 체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민사회에서 제시한 거죠. 지금 보면, 이 중 많은 부분이 현장에서 실천되고 진행된 것 같아요. 물론 일부 과제들은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죠(M 면담).

당시 대통령 후보들을 대상으로 체육 정책 공약 비교 자료집을 만들고, 체육 정책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제안했던 측면은 선진적이었지만, 정부가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체육시민연대가 감시와 견제 역할까지 철저히 하지는 못했다.

또 다른 예로는 2006년부터 매년 진행한 국정감사 모니터링(monitoring)을 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안민석 의원실과 협업하여 학생선수 인권 및 학교 스포츠 정상화 관련 국정감사 자료집을 여러 차례 발간

표 3. 2003년 참여정부 출범 당시 체육개혁 10대 과제

순번	과제명
1	국무총리 직속 체육위원회 설치
2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분리
3	‘엘리트스포츠 패러다임’에서 ‘모두를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으로 정책 기조 전환
4	한국형 스포츠클럽의 확산 및 지원
5	학교와 지역사회 체육연계 시설 확충
6	체육지도자 인력확보와 처우개선
7	어린이·청소년 체육 활성화 지원
8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9	프로스포츠 노조설립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10	정기적 남북 스포츠 교류 및 국제대회 시 남북 단일팀 구성

했다. 이 외에, 최근에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의 공정성 관련 문제 제기(박상현, 2020)를 비롯해, 대한체육회 3종협회,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등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들의 비민주적 운영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하며 모니터링 반경을 넓히고 있다.

### 3. 기획사업

체육시민연대의 기획사업은 첫째, 체육대학 폭력문화 극복, 둘째, 반전·반핵·평화 마라톤, 셋째, ‘몽글몽글’ 글쓰기 과정으로 나타났다.

#### 1) 체육대학 폭력문화 극복

2000년대 체육시민연대의 주요 사업이 엘리트스포츠의 학습권, 폭력, 성폭력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2007년 발생한 유도학과 신입생 사망사건은 전문체육인이 아닌 일반학생들의 폭력적 문화에도 관심을 두고 이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 계기가 됐다. 2007년 2월 당시 Y 대학교 유도학과 신입생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폭력으로 사망했다. 당시 다른 대학 체육계열 학과에서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얼차려를 주는 등 폭력적 문화가 언론에 보도되었다(안민석, 홍덕기, 2019). 체육시민연대는 ‘체육개혁실천을 위한 교수연대’와 함께 체육대학 폭력 극복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체육과 교수로서 학생들의 폭력적 문화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언론에 보도된 대학을 항의 방문했다(한겨레, 2007년 3월 13일).

그때 체육시민연대 집행부에서 기자들과 함께 Y 대학교 총장이랑 K 대학교 부총장을 찾아가서 항의 면담을 했었지. 그 후부터 교육부에 매년 학기 초마다 공문을 보내고 모니터링하는 일들을 진행했고.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기획을 했던 사례로 의미가 있지(H 면담).

체육시민연대는 체육대학 폭력문화가 신입생 길들이기부터 시작해 대물림되는 구조에 대해 매년 2월 교육부에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사례가 보고되면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교육부에 요청하는

공문투쟁을 진행했다. 그 결과, 교육부에서 매년 초에 각 대학 체육과에 폭력근절과 관련된 공문을 전달하면서 매년 ‘신입생 길들이기’란 명목으로 발생하는 폭력적 문화 근절을 위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다만, 폭력적인 문화는 개별폭력 사례와는 다르게 스포츠 분야의 위계적이고 억압적인 문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체육시민연대의 노력만으로 완전히 근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했다(홍덕기, 2021).

우리가 모든 걸 다 바꿀 수는 없지. 우리의 역할은 시민단체로서 체육 분야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이슈를 만드는 것이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부분이지(H 면담).

## 2) 반전·반핵·평화 마라톤

체육시민연대는 2011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거버넌스 역할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의제를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그런 가운데 H 교수가 3기 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스포츠는 평화다.’라는 슬로건(slogan)을 중심으로 ‘신일본 스포츠연맹’과 연대를 통해 제1회 ‘반전·반핵·평화 마라톤’을 개최했다.

그때 간간이 일어나는 폭력 사건들은 있었지만 큰 의제가 될 만한 사건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런 속에서, ‘스포츠는 평화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국제 시민사회 연대사업들을 해나가기 시작한 거지. P 대표님도 마라톤을 좋아하시니까 이길 계기로 본격적으로 체육시민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셨고(R 면담).

N 대표님이 일본이랑 교류하면서 일본의 체육관련 시민단체인 ‘신일본 스포츠연맹’을 소개해줘서 같이 하게 됐죠. 그때 일주일에 걸쳐서 부산에서 판문점까지 해서 500km 릴레이 마라톤을 완주하면서 체육인으로서 자부심을 많이 느꼈죠. 또 ‘스포츠를 통한 평화’라는 주제 자체가 상징성도 있고(M 면담).

‘반전·반핵·평화 마라톤’ 대회의 개최는 스포츠를 통한 국제교류 및 평화의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다만, 인력이 부족

한 상황에서 모든 조직의 역량을 대회 개최 준비에 집중하면서 다른 활동에 영향을 주었다.

그때 부산부터 임직각까지 종주하는 루트(route) 때문에 모든 스태프가 퍼졌지. 결국, 그 해는 그걸로 접었어. 총력을 다하는 바람에 다른 활동을 할 여력을 안 남기고 다 소진한 거지(J 면담).

제1회 ‘반전·반핵·평화 마라톤’의 교훈을 계기로 2013년 제2회 ‘반전·반핵·평화 마라톤’은 ‘노근리 학살사건<sup>2)</sup>’의 장소인 충북 영동군 노근리에서 임진각 까지로 설정해서 상징성은 유지하되 거리를 축소하여 진행했다. 이때부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 지원을 받아서 스포츠를 통한 평화와 국제학술교류를 주제로 ‘스포츠 평화 포럼’을 같이 개최했다. 이후 ‘스포츠 평화 포럼’은 정례화되어 ‘스포츠’, ‘인권’, ‘평화’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는 형태로 발전한다. 이후로도 반전·반핵·평화 마라톤은 2016년 3회(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부터 서울시 중구 일본대사관 소녀상까지 50km)와 2018년 4회(서울대학교 정문부터 서울시청 광장까지 12km)까지 이어졌다.

## 3) ‘몸글몽글’ 글쓰기 과정

체육시민연대는 또 다른 기획사업으로 ‘몸글몽글’이라는 글쓰기 과정을 개설했다.

2015년에 K 대학 체육과 교수들이 논문표절로 인해 단체로 징계를 받았어. 그 당시 언론인이나 체육시민연대 고문으로 계시던 U 선생님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 이건 단순히 K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체육계에서 논문을 쓸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생각하신 거지. 그래서 U 선생님이 운동선수나 체육 전공 학생들을 모아서 글 첨삭지도를 하자고 제안하셨지(J 면담).

‘몸글몽글’ 글쓰기 과정의 운영방식은 한 반에 7명

2) 1950년 7월 말 4박 5일 동안 노근리 경부선 철도 아래와 터널에 피신 중이던 마을주민 400여 명에게 미군이 무차별 사격하여 살해한 사건을 말한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희생자만 150명, 행방불명 13명, 후유장애 63명, 등 266명이며 유족은 2240명이다(NEWSIS, 2021년 6월 24일).

씩 글쓰기 반을 개설해 방학 8주 동안의 강의와 글쓰기 첨삭지도를 병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몽글몽글’은 체육인들의 스포츠 참여 경험을 논리적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역량 강화와 함께 스포츠 분야 시민 활동가를 양성하자는 의도가 있었다. ‘몽글몽글’ 과정은 3기까지 이어지며 총 5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수료생 중 몇몇은 체육시민연대에서 활동가로 일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L 전 사무국장이 ‘몽글몽글’ 1기야. 글쓰기도 많이 늘었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좋았지. 뭔가 바꿔보겠다는 의지와 자질도 있고 활동을 열심히 했어(J 면담).

W 사무국장 같은 경우도 ‘몽글몽글’을 통해서 삶의 지향이 바뀐 경우죠. 보통은 내가 체육시민연대 사무국 일을 권유하는데 이 친구는 나랑 상담하다가 먼저 체육시민연대에서 일하고 싶다고 한 친구예요. 테니스 선수 출신인데 사유(思惟)의 힘도 좋고 비판적인 관점도 있고 실천력도 좋죠(H 면담).

## 4. 연대사업

체육시민연대의 연대사업은 첫째, 국내·외 시민단체와의 교류, 둘째, 정부 기관과 거버넌스 구축으로 나타났다.

### 1) 국내·외 시민단체와 교류

체육시민연대는 국내·외 시민단체와 다양한 교류를 통해 연대활동을 진행했다. 이는 시민단체 활동 특성상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여론의 이슈화를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었던 이유가 크다(참여연대, 2014). 체육시민연대의 경우, 문화연대와 공동으로 활동을 많이 했다. 문화연대는 문화적 관점에서 스포츠 분야의 시민운동 참여에 적극적이었으며 산하 ‘체육위원회’와 2011년 창립한 ‘스포츠문화연구소’를 통해 공동으로 성명서나 기자회견, 일인시위, 토론회 등을 전개했다(이경렬, 2020).

2000년대 중반부터 어떤 사안이 생기면 문화연대

의 Q 교수와 V 활동가랑 우리가 늘 같이 일을 했지(R 면담).

특히, 2010년대부터는 J 교수가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과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은 연임하고, L 활동가 역시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에서 모두 활동가를 하며 더욱 긴밀하게 연대했다(이경렬, 2020). 대표적인 연대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대문운동장 철거반대 운동이다(OSEN, 2007년 8월 2일).

그 당시 프로야구 선수들과 같이 동대문에서 가두 캠페인도 하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했었지. 문화연대는 동대문운동장이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 (중략) ... 이 사건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엘리트 체육의 폐단과 관련한 부분만 얘기하다가 실질적으로 엘리트 체육 선수들하고 결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R 면담).

저는 문화연대 ‘체육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동대문운동장 철거 문제가 이슈였을 때 체육시민연대를 알게 되고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거죠. 그 당시 사실 적극적으로 활동하거나 하지는 않고 회비를 내는 회원으로 함께하고 사안이 있을 때 한 번씩 같이하는 정도였어요(S 면담).

둘째, 평창동계올림픽의 분산 개최와 친환경올림픽을 위한 시민운동이다. 2010년과 2014년 두 차례 도전에서 실패했던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는 시민사회에서 큰 문제 제기가 없었는데 특히 스포츠 분야의 시민단체는 이를 사회 쟁점화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한승백, 2010).

‘그렇다고 올림픽을 하지 말라고 할 순 없지 않냐’ 하는 분위기였지. 아무리 올림픽의 단점이 있다고 해도 엘리트스포츠 선수들이 목숨 걸고 메달을 따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올림픽을 반대하자는 얘기를 못 했었거든. 체육시민연대 내부적으로는 약간 미온적이었어(J 면담).

이후 세 번째 도전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자 시민사회에서 분산 개최에 대한 목소리

를 냈다.

결정적으로 올림픽 아젠다 2020이 나오면서 토마스바흐 IOC위원장과 올림픽 개최 조정위원장이 돈 많이 드는 슬라이딩센터는 나가노에 있는 거 쓰고 분산 개최하자는 얘기를 먼저 꺼냈었거든. 그래야 비용도 절감되고 대회 이후 재정적으로 부담되는 부분도 줄일 수 있으니까(J 면담).

하지만, 분산 개최가 무산되며 경기장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이슈가 문제가 됐다. 체육시민연대는 이를 막기 위해 환경단체와 연대해서 ‘가리왕산 지키기 운동’을 전개했다(Le Monde, 2015년 3월 4일).

그때 평창올림픽 분산 개최 관련해서 프랑스 르몽드지에 기고도 하고,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랑 연대해서 가리왕산 앞에서 시위도 했지. 그로 인해 활동가도 잡혀가고 했었지(J 면담).

셋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체육인 시국선언이다. 당시 승마 특기생이었던 정유라의 대학 부정 입학 사건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기폭제가 되어서 정권퇴진운동으로 이어졌다(임용석, 홍덕기, 2021). 체육시민연대는 그 과정에서 ‘모욕과 자괴감의 스포츠 시대를 넘어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연합뉴스, 2016년 11월 7일).

그때는 사회 각 분야의 시민사회 단체의 시국선언이 잇달았지. 근데 국정농단이 다 정유라 승마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체육계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고 해서 스포츠문화연구소와 체육시민연대가 같이 체육인 시국선언을 하고 교수 서명받아서 기자회견을 했지(R 면담).

넷째, 2019년 ‘스포츠 미투(#Me Too)’에 따른 연대 활동이다. 2017년부터 문화, 예술계를 비롯한 한국 사회 전반에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데 유독 체육 분야만 조용했다(정용철, 2018).

저는 2018년 여름 ‘여성인권진흥원’에서 리듬체조

탈북자 출신인 유소년 체조 국가대표 코치의 스포츠 미투 사건을 돋고 있었죠. 그러다가 여검사 미투 사건이 너무 크게 이슈화되는 바람에 스포츠계 미투는 묻혔죠(S 면담).

이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력 사건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임용석, 홍덕기, 2021). 체육시민연대는 문화, 여성, 인권 분야 18개 시민단체와 함께 ‘쇼트트랙 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과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꾸렸다(이경렬, 2020). 공대위는 가해자 엄벌, 피해자 보호와 함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고 이를 계기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홍덕기, 2020).

2019년 1월에 쇼트트랙 성폭력 사건이 터지면서 스포츠 성폭력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됐죠. 이전까지 스포츠 단체나 스포츠인 출신들이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한 사례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여자 선수 출신 시민단체 경험, 스포츠 성폭력 사건 상담 등을 바탕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하게 되었구요(S 면담).

다섯째, 국제연대이다. ‘반전·반핵·평화 마라톤’을 통해 일본의 ‘신일본 스포츠연맹’과 프랑스의 체육시민단체와의 교류가 이어졌다.

처음 ‘반전·반핵·평화 마라톤’ 할 때는 ‘신일본 스포츠연맹’하고만 같이 했는데 두 번째 할 때부터는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이 왔었어. 그리고 프랑스의 스포츠 시민단체 행사에 체육시민연대가 초대받아 K 대표와 H 집행위원장이 갔었지. 이게 일본하고 교류에서 시작해서 유럽까지 연결이 된 사례지(R 면담).

## 2) 정부 기관과 거버넌스 구축

체육시민연대는 때에 따라서는 정부 기관과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도 했다. 앞서 예를 들었듯이, 2000년대 후반 체육시민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거버넌스 구축이 첫 사례다. 이후, ‘반전·반핵·평화 마라톤’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스포츠

평화사업'을 진행했다.

2019년에는 스포츠 패러다임의 변화를 목표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정부·민간합동 범정부적 거버넌스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여성기족부, 기획재정부, 국가인권위원회 5개 부처의 차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고, 스포츠, 인권, 여성, 장애인, 법조인,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5명이 참석해 1년 동안 총 96회 회의를 통해 7개의 권고문을 발표했다(홍덕기, 2020). 이는 스포츠 분야에서 전례가 없는 일로 민간위원 15명 중에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 출신 인사 7명이 합류했다.

체육 시민사회 인사들이 혁신위에 대거 합류하게 된 배경은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을 스포츠 분야의 인권과 관련해서 활동해왔던 일종의 필모그래피(filmography)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봐. 우리가 정부와 늘 대립 관계에만 서는 게 아니라 때론 감시 역할을 철저히 하면서 거버넌스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야 조금씩 만들어 진 거지(R 면담).

거버넌스를 통해 발족한 '스포츠혁신위원회'의 7개 권고안은 기존의 한국 스포츠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본 초석을 잘 다져놓았다(임용석, 홍덕기, 2021).

한국 사회 엘리트스포츠가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폐쇄성을 열린 구조로 만드는 측면에서 혁신위 권고안은 현재 다른 어떤 정책문서보다 잘 구성이 됐다고 생각해(R 면담).

그래도 희망을 본 게 스포츠정책과학원, 대학스포츠협의회, 학교체육진흥회 등에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에 기반한 예산이 몇억씩 만들어져서 집행되고 있는 걸 봤어요. 이걸 보고 '그래도 혁신위의 권고사항 중 여러 과제가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구나.'하고 생각을 했죠(H 면담).

한편, 체육시민연대 입장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해온 사람들이 혁신위로 빠져나가면서 활동에 큰 영향을 받기도 했다(이경렬, 2020).

'체육시민연대에서 그렇게 많이 갔었어야 했나?'라는 얘기도 있었죠. 핵심 인사가 다 그쪽에 가서 일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일을 못 했죠. 너무 인원이 소수이다 보니까 외부 영향을 안 받는 듯하면서도 영향을 받는 거죠(H 면담).

## 5. 조직사업

체육시민연대의 조직사업은 첫째, 사무국과 집행부 운영, 둘째, 전문성 함양 및 홍보로 나타났다.

### 1) 사무국과 집행부 운영

운영위원회는 N 교수를 위원장으로 약 30명의 직군별 대표성을 떤 사람들이 참여해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역할을 했고, 집행위원회는 5명의 체육과 교수들이 의결한 안건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1기 집행부에서 큰 역할을 했던 운영위원회는 2기 집행부에서 활동이 줄어들었다.

초창기에는 운영위원회에 체육 교사 등 다양한 직종의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교수는 몇 명 안 돼서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집행하는 일을 담당했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운영위원회가 줄어들면서 그냥 집행위원회에서 운영위 역할을 같이 하게 된 거죠(M 면담).

집행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개최되었으며 사무국 업무, 회원 관리, 홍보, 재정, 성명서, 기획 등 체육시민연대 전반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했다. 2기 집행부(2005-2009)에서 새로운 집행위원의 영입은 H, K, O 교수 등 대부분 대학교수로 채워졌고 집행위원회는 15명 내외로 구성되었다. 이때부터 다양한 직군의 운영위원 중심에서 교수 위주의 집행위원 중심으로 의사결정 구조가 넘어갔다. 당시 N 운영위원장이 공동대표로 취임하면서 집행위원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한편, 교수 중심으로 집행부가 꾸려지다 보니 사무국 인력도 자연스럽게 교수들이 속한 대학교의 대학원생들을 통해 충원했다. 한편, R 집행위원장과 F 사무국장이 각각 연구년제와 유학으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2009~2010년 체육시민연대 활동에 공

백기가 발생했다.

또한, 공동대표로 많은 역할을 담당한 G 공동대표가 다른 단체의 장에 선임되어 체육시민연대 대표직을 사임하게 되었다. 이후, R 교수와 P 대표가 새롭게 공동대표로 합류하게 되어 3기 집행부(2011-2015)로 이어졌다. 3기 집행부는 이미 2기 집행부 때부터 체육시민연대의 집행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R 교수와 H 교수가 각각 연구년제를 해외로 다녀온 후 공동대표와 집행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안정감을 찾았다.

저는 R 대표님이 체육시민연대에 가장 코드가 잘 맞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전달력도 있으시고 이미지도 선명하고 비판적 시각도 있으시고. 그리고, H 교수님은 추진력도 있으시고 꾸준히 사무국 활동가들을 데리고 오셨죠(M 면담).

또한, J 교수와 P 등 새로운 인물들을 집행위원으로 영입해서 체육시민연대에 참신함과 전문성, 상징성 등 활력을 불어넣었다.

J 교수님이 꺼져가는 체육시민연대에 불을 좀 붙였다고 할까. 스파크 역할을 했죠(M면담).

이후, 4기 집행부(2016-2020)에서는 3기에 집행위원으로 합류한 J 교수가 집행위원장으로 선임되고, 체육시민연대 초창기부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N 대표와 R 대표가 건강 등 개인사로 그만두면서 공동대표 세 명이 M 교수, P 대표와 K 교수로 모두 바뀌게 된다. 먼저, M 교수는 남성 중심의 체육시민연대 집행부에서 여성이자 창립회원으로 사무국을 챙기는 등 체육시민연대에 많은 역할을 했다.

여성이 공동 대표하는 것도 상징성이 있어서 M 교수님을 공동대표로 모시게 됐지. 그래서 기존의 남성이나 교수 위주의 권위적이고 딱딱한 조직문화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지(J 면담).

또한, 평화 마라도너이자 주류 시민단체에서 활발

한 활동을 해왔던 P 대표의 합류는 시민이 체육시민연대를 이끌어간다는 상징성이 있었다.

당시 문제의식이 ‘시민 없는 시민단체’였거든. 그래서 P 선생님이 공동대표가 되는 게 시민이 단체를 끌고 나가야 한다는 일종의 상징성이 있어서 공동대표로 모셨지. 또 이분이 참여연대나 역사문제연구소 등 주류 시민단체에서 여러 역할을 하셨던 분이셔서 외연이 확장되는 측면이 있었지(J 면담).

4기 집행부는 M 공동대표가 Z 학회의 학회장을 맡게 되어 공동대표직을 사임했다. 5기 집행부(2021-현재)에서는 H 교수가 공동대표, F 교수가 집행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F 집행위원장은 2000년대 중반 체육시민연대의 2기 집행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활동가로서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지고 있고, 해외 유학 후 한국에 교수로 임용되면서 다시 체육시민연대 활동을 시작했다(홍덕기, 2017). H 교수는 2005년부터 체육시민연대 사무총장, 집행위원장 등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고 사무국 활동가를 꾸준히 영입하는 등 사무국 인력의 수급과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체육시민연대를 거친 사무국 활동가들은 총 15명 정도 내외인데 활동가가 두 명 이상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혼자서 사무국 일을 다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재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상근으로 사무국장을 고용한 경우는 5년간 활동한 Y 사무국장의 경우 등을 제외하고 전무 했다. 주로 비상근으로 활동가를 고용하는 상황에서 활동가들이 1~2년 정도 활동하고 교체되는 상황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돌이켜보면 제가 대부분 사무국 운영을 주도해 온 거 같아요. 역대 사무국장 중에 꽤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도 있었고 1년 이내에 그만둔 분들도 있었죠. 예산이 적다 보니 월급이나 대우를 잘 못 해준 측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사무국 운영이 제대로 안 된 적도 있었고요(H 면담).

사무국 재정은 전적으로 유료회원의 회비로 운영이 되었는데, 유료회원의 수는 늘 150명 전후로 유지되

면서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했다. 이는 사무국 월세와 운영비를 지출하고 나면 활동 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었다. 따라서, 공동대표 3명이 유료 회비의 많은 부분을 정기적으로 부담했으며, 재정이 어려울 때마다 집행위원을 중심으로 특별후원금을 걷어서 재정을 충당했다. 이러한 재정적 불안정성은 회원 관리의 미흡 등에도 영향을 주었다.

## 2) 전문성 협약 및 홍보

체육시민연대는 조직사업 중 하나로 전문성 협약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체육시민연대 영문명이 ‘Civic Network for Justice in Sport’거든. 이걸 줄여서 씨넷(CNet) 포럼이라고 이름을 지었지. 씨앗의 의미도 있고. 우리 내부 사람들끼리 토론뿐만 아니라, 체육 분야 밖의 저명인사들도 불러서 토론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J 면담).

내 기억에 체육시민연대가 여전히 체육 속에 갇혀 있어서 지평을 좀 넓히자는 취지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을 모셔서 씨넷 포럼을 진행했지. 근데 이게 의도는 참 좋은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좀 지쳤지(R 면담).

한편, 씨넷 포럼과 더불어 체육시민연대를 알리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기존의 체육시민연대 홈페이지 공지만으로는 홍보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소식지의 발행은 언론보도 이외에 체육시민연대의 활동을 회원과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초창기 소식지는 사무국 역량의 한계로 인해 비정기적으로 이메일로 발송됐다. 이후 사무국 역량이 갖춰지면서 매주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발행하고 SNS, 이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했다.

우리 단체가 살아있다는 걸 알리려면 뉴스레터를 만들어 홍보하자고 해서 매주 발행했지. 칼럼을 길게 쓰지 않아도 한 문단 정도 써서 한 주 동안 체육계 소식이나 기사랑 같이 첨부하는 거였지. 꾸준히 뉴스레터를 발행하다 보니 나름대로 체육시민연대를 알리는 역할을 한 거지(J 면담).

체육시민연대는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회원 가족 운동회, 등산, MT 등을 기획하고, 회원의 날, 후원의 밤 등을 개최했다.

회원 가족 운동회, 청계산 등산, 1박 2일 MT 등도 있었죠. 그리고 회원의 날을 정해서 프로야구 경기 단체 관람, 가수 콘서트 티켓 나눔도 했던 것 같고요 스포츠용품 나누기 행사 등도 진행했었죠(M 면담).

체육시민연대를 후원해주는 일반회원들이 당사자가 되어 체육시민연대에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단체의 존립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회원 간 친목 도모 사업이 재정적인 문제로 자주 개최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다.

## 체육시민연대의 삶, 되짚어보기

‘체육시민연대의 삶, 되짚어보기’는 체육시민연대의 지난 20년간 삶의 궤적을 돌아보면서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해 탐색했다. 또한, 체육시민연대의 역할과 향후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했다.

### 1. 성과

체육시민연대는 타 분야와 비교해 많이 늦었지만, 스포츠 분야 최초의 시민단체로서 2002년 창립부터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감시자로서 있으면 해도 충분한 의의는 있지. 체육계도 사실 체육시민연대 때문에 자정작용이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에 체육시민연대가 남긴 족적은 분명한 거야(N 면담).

척박한 체육계에서 오랜 기간 살아남아 목소리를 내온 시민단체인 거는 확실하지(J 면담).

특히, 체육시민연대는 이슈의 의제화에 충실했다.

체육시민연대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오랜 기간에 걸친 활동은 서서히 대중의 인식을 바꾸었으며 스포츠 분야에 뿌리내린 일부 불합리한 제도와 구조, 문화에 파열음을 냈다.

학습권 침해, 폭력, 성폭력 등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들을 세상 밖의 이슈로 꺼내놓고 이를 해결하려고 했죠. 대중 속으로 들어가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노력 들이 기억에 남아요(H 면담).

최근 체육시민연대의 논평이나 성명서, 기자회견 등은 실제로 스포츠 분야에 일정 부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쌍둥이 배구 선수 학폭 사건의 경우 체육시민연대의 성명서 발표(한국경제, 2021년 4월 7일)는 주요 포털사이트 메인에 오르내리는 등 대언론전 효과가 있었다(한국경제, 2021년 4월 7일).

체육시민연대가 2차 가해하지 말라고 성명서 발표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일별백개 효과가 지속이 되지요. 피해자 중심주의를 응호하는 측면에서 체육시민연대의 성명서가 시기적절했던 것 같아요(S 면담).

또 다른 예로, 최근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후보자의 인사 관련 기자회견과 성명서 등은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후보자의 인준 거부를 이끌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라는 체육시민연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민중의 소리, 2021년 2월 17일).

이 사건의 경우 사후 대응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먼저 이슈를 던지고 체육단체장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봐요 (H 면담).

또한, 체육시민연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의 경우 타 시민단체와의 연대나 정부와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사안에 대응한 점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포츠인권’이라는 용어조차 낮설던 2000년대 후반부터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스포츠인권을 사회적으로 의제화시켰고, 체육시민연대 출신 인사가 ‘스

포츠혁신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해 스포츠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홍덕기, 2020).

정부 감시의 역할과 더불어 이제는 거버넌스로 참여하면서 ‘만인이 즐기는 스포츠 세상’을 향해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했다고 생각해(R 면담).

## 2. 한계

체육시민연대 활동의 한계는 첫째, 조직의 불안정성과 확장성 부족이다. 체육시민연대 창립 초기의 구성원은 나름대로 직군을 대표하는 시민들이 모여있는 조직이었다. 예를 들어, 초창기 발기인대회와 정식회원으로 참여한 사람을 살펴보면 언론인, 체육 교사, 생활체육 동호인, 엘리트스포츠 지도자, 의사, 법조인 등 다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수 체육 전공 학자들 중심으로 운영됐다.

늘 딜레마인 게 체육시민연대는 ‘시민’이 주인인데 교수연대 같은 느낌이 있었죠(M 면담).

체육시민연대 집행부 구성원이 교수 중심으로 운영된 이후부터는 전문성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시민단체가 지향해야 할 대중성이나 풀뿌리 운동에는 한계를 보였다. 이는 전문성과 대중성 사이의 불균형으로 이어졌다. 한편, 구성원의 다양성 부족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열린 조직을 운영하는데도 제한점으로 작용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활동하는 절대 인원이 15명 내외로 작은 조직 기반과 역량으로 인해 집행부 구성원들이 지치는 상황도 발생했다.

체육시민연대의 한계는 소수의 체육과 교수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전히 학연, 지역, 혈연을 중시하고 강력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체육계에서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봐요(S 면담).

소수 대학교수 중심의 집행부는 대학원생 비상근 활동가 위주의 사무국 운영으로 이어졌다. 이는 안정

적인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제한점으로 작용했다. 체육시민연대 활동의 활성기와 침체기는 사무국의 안정화 문제와도 긴밀한 연관이 있었다.

체육시민연대의 업앤다운(up & down)은 사무국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었죠. 사무국 상근 활동가가 있어서 서포트(support) 해주고 진행이 되면 뭔가 일이 되니까. 그런데 그런 도움을 줄 사무국 인력이 없으면 다 무기력해지지(H 면담).

결국 조직의 역량은 사람 문제이고 재정문제거든. 사무국 상근직원이 2-3명 이상 된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 근데 돈이 없으니... 대학원생들 데리고 하긴 하는데 '이거 못 할 짓이다.'하는 생각도 들어. 인건비를 여유 있게 쟁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N 면담).

체육시민연대는 체육을 전공한 학자들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직군들이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지 못했다. 또한, 스포츠 분야 이외의 단체와 긴밀하게 교류하는 데 일정 부분 한계를 보였다.

스포츠 분야 시민사회는 확장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체육인들이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토대가 다른 분야에 비해 약해요. 사람이 없어요. 확장성도 부족하고(H 면담).

둘째, 정보력 및 사업의 다양성 부족이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또한, 정책의 우선순위와 방향성, 이행과정, 예산 등 전문적인 능력이 없이는 선제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양현모, 2002; 윤영진, 2008).

돌이켜보면 우리가 언제나 어떤 사건이 터진 후에 뒷북을 쳐온 거야. 그런데 다른 시민사회 단체는 그렇지 않거든. 왜냐면 그 단체 구성원들이 일종에 이너써클(inner circle)만 알 수 있는 정보수집 능력이 있거

든. 이를 통해서 고도의 정책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 입안 과정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 능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는 거지(R 면담).

한편으로는 체육시민연대의 사업이 지나치게 엘리트스포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도 하다. 이는 조직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하면서 다른 분야의 사업을 발굴해내지 못하는 한계로 작용한다.

지속적 사업보다는 그때 당시 문제가 되었던 사건을 쫓아서 일회성으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엘리트스포츠의 폐단을 지적하는 데에만 너무 치우쳐서 사회적 합의나 더 많은 공감대를 얻는데 부족하지 않았나...(M 면담).

### 3. 향후과제

체육시민연대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고려해야 할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의 지속 가능성 개선이다. 경제적 안정화 방안과 현재 집행부의 노쇠화는 체육시민연대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제 20살이 되면 독립을 해야 하잖아. 독립의 가장 기본 조건이 경제적인 거잖아. 우리는 그동안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감시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일종의 강박증이 있었던 거 같아. 근데 다른 시민단체는 그렇지 않거든. 사실은 정부가 해야 하는 걸 시민단체가 대신 거버넌스로 해주는 측면도 존재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봐(R 면담).

국가에서 체육시민연대 같은 일을 못 하니까 우리가 이런 조직을 만든 거잖아. 장기적으로는 준 공영단체처럼 민간합동 거버넌스의 역할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앞으로 또 다른 20년을 새롭게 개척할 것인가? 아니면 노인정으로 남을 것인가? 고민해봐야지(N 면담).

시민운동 진영의 세대교체는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고민하는 문제이다(노중기, 2015). 결국, 이 문제를 어

떻게 해결하느냐에 체육시민연대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년 이상 체육시민연대 활동해오신 분들은 이 일 이 체육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재정적인 것을 내놓으면서 희생을 하다 보니 좀 친진 부분이 있죠. 희생의 강요만으로는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M 면담).

체육인들을 의식화해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작업이 중요해요. 스포츠 분야에 어떤 문제가 다시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엘리트 선수 출신이나 지도자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 벽이 존재하지만, 이들을 당사자로 끌어들이지 못하면 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S 면담).

둘째, 전문성과 대중성의 조화이다. 체육시민연대는 운동방식에서 전문성과 대중성 사이의 딜레마가 존재했다. 이 둘은 시민운동에 모두 중요한 두 축이므로 이를 동시에 추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사회적 의제 설정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의 참여가 더 강조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 중심의 시민운동에는 한계를 보인 것 또한 사실이다. 시민참여 없는 풀뿌리 운동의 한계점이 그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문성과 더불어 대중성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대중적으로 얻지 못하는 사업은 실현되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생활스포츠 지도자나 스포츠 동호인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회원들을 영입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생활영역과 밀착된 과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 감시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감시의 방향에 있어서 시민의식을 포괄하는 당사자 운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코로나 상황에 어려운 스포츠 업종 종사자들에게 힘이 되는 생활스포츠 활성화 사업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스포츠를 즐기는 일상이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스포츠 관련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만인이 즐기는 스포츠 세상’ 모토에 걸맞게 생활체육으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죠. 시민의 건강과 스포츠 참여와 관련한 캠페인 같은 것들이요(M 면담).

셋째, 견제와 거버넌스의 적절한 균형이다. 체육시민연대는 엘리트스포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주로 집중하다 보니 견제의 역할에 치중하고 거버넌스 역할에는 소홀했다.

시민단체로 어떤 상황에서 견제의 역할을 하고, 어떤 때 거버넌스의 역할을 하는가를 잘 판단해야지(R 면담).

시민사회와 거버넌스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김민, 서희진, 2021).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시민사회는 자발적이며 민주적인 비정부기구 혹은 비영리기구로서 스포츠와 관련한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적 관점의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해 불공정한 스포츠 구조와 문화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한편, 정부의 스포츠정책 개발과정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치(協治)의 과정’이기도 하다(남상우, 2014). 시민사회는 견제의 역할과 더불어 거버넌스의 역할에도 충실히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혁신위의 권고 이후의 이행과정을 지속적이고 세밀하게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

혁신위원회의 권고로 제도적 기틀을 갖추기는 했는데 이 권고가 제안이지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체육시민연대가 앞으로 혁신위 권고의 진행 상황에 대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이행이 잘되고 있는지 점검도 필요할 것 같아요(M 면담).

넷째, 정치적 중립성 확보다. 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조직 자체가 한쪽의 정치 지향을 대변하는 단체로 비치면 진영논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체육시민연대에 들어왔더니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어디 다른 단체장이나 정치권으로 진출하면 다음부터

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겠지. 하지만, 그게 과연 시민단체로서 건강한 일인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거든(J 면담).

한국 사회의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의 경우, 활동을 바탕으로 정치권 진출을 출구전략으로 삼는 경우가 존재했다. 이는 한국의 시민사회 운동이 여전히 이념 지향적임을 반증한다(참여연대, 2014). 21세기 시민단체의 역할은 미래 지향적인 시민운동과 전근대적 국가 체제에 대한 감시와 비판, 저항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건강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처럼 풀뿌리 생활영역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거시적 차원에서 연대를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스포츠 분야 최초의 시민단체인 체육시민연대의 활동을 문헌분석과 개별 면담을 통해 분석했다. 연구 결과, 체육시민연대는 2000년 장희진 수영 선수 사건과 이에 따른 체육교수 서명운동을 계기로 ‘만인이 즐기는 스포츠 세상’을 꿈꾸며 2002년 창립했다. 이후 현재까지 20년간 한국 사회 스포츠 분야의 이슈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건전한 체육문화의 정착을 위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다양한 시민단체와 교류 및 정부 기관과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스포츠 분야 시민사회 운동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했다. 이는 국가 주도의 성과 지향적 스포츠 패러다임으로 학생선수를 국위선양을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보는 지배적 관점에 대한 저항으로 기능했다. 개인은 국가의 스포츠정책으로 인한 권위주의적 통제에 익숙해져 관행의 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다. 스포츠 분야 시민사회의 역할은 모든 사람이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정책을 견제 및 보완하는 데 있다. 체육시민연대의 탄생과 그동안의 활동 성과는 한국

사회 전반의 시민사회와 구성원들의 의식이 성숙하기 시작한 역사적 맥락에 기인한다. 이는 스포츠 분야에서도 시민운동 조직이 발전하여 바람직한 스포츠의 모습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불어 시민사회가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스포츠 문화와 구조적 관행에 개입하여 문제해결 및 변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체육시민연대의 활동엔 성과와 더불어 분명한 한계도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구성원의 정치적 중립성, 다양성, 대중성 확보를 통해 축소된 조직의 확장성과 경제적 문제, 새로운 인물의 영입 등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일은 시급한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견제와 거버넌스의 적절한 균형을 통한 사업의 다양성 확보와 더불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보다 정밀한 대응은 풀어야 할 과제이다.

향후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분야 시민단체 사례로 체육시민연대를 선정했는데 향후 스포츠 분야의 다른 시민단체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체육시민연대의 핵심적인 인사들을 면담대상으로 정하고 조직 내부의 입장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을 분석했는데 스포츠 분야의 여러 다른 단체나 정부, 학회 등 외부의 입장에서 체육시민연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기며 본 연구 결과가 건강한 체육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에 기초자료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옛날부터 꿈꿔왔던 체육의 모습은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거였거든. 체육시민연대는 나에게 그런 꿈들이 실현될 수 있는 실험적 공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R 면담).

## 참고문헌

장신복(2003). **학원 스포츠의 개혁: 의식 전환과 제**

- 도 개선. 학원체육정상화를 위한 긴급토론회: 공부하는 학생선수, 과연 불가능한가?** 체육시민연대, 한국스포츠교육학회, 전국체육교사모임 공동주최 긴급토론회, 5-16. 강신욱(2004). **운동선수 구타의 실상과 대책. 쇼트트랙 선수파동을 계기로 본 “학생선수” 문제와 대책.** 체육시민연대, 한국체육학회, 국희문화정책포럼 공동주최 긴급토론회, 1-18.
- 김민, 서희진(2021). 스포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9(1), 65-86.
- 김방출, 서재철(2019). 체육교과 인성교육의 시민성 접근 제언.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6(1), 55-75.
- 김준기(2006). **정부와 NGO.** 서울: 박영사.
- 김현수, 박성주(2020). **스포츠인권 정책분석과 개선 방향: 학습권 보호를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 59(5), 13-30.
- 남상우(2014). 시민사회와 스포츠 거버넌스의 이론화.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7(1), 1-25.
- 노중기(2015). 성년의 참여연대,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와 사회**, 105, 244-249.
- 민중의 소리(2021.02.17.). 대한체육회, ‘맷값 폭행’ 최철원 아이스하키협회장 당선인 인준 거부.
- 박상현(2020).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제도 개편의 쟁점 및 과제. **한국체육학회지**, 59(4), 333-344.
- 박순성, 김동춘, 남부원, 박영선, 박정은, 조대엽, 김형종, 홍상만(2014). 참여연대 20년, 도전과 성찰 그리고 새로운 모색. **시민과 세계**, 25, 130-164.
- 박효정, 최승훈(2006). 내가 만들어가는 교육자의 길- 홍덕기 체육시민연대 사무차장. **초등우리교육**, 62-65.
- 신율(2001). 한국 시민운동의 개념적 위상과 문제점: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2), 159-180.
- 안민석(2002). **한국체육시스템의 개혁과 대안.** 한국체육발전을 위한 체육시민연대 긴급 연속 토론회 2: 학교, 생활, 엘리트 체육은 별개인가? 체육시민연대, 21-30.
- 안민석, 임현진, 정홍익, 박홍규(2001). 21세기 한국스포츠의 지향: 국가, 시장 및 시민사회.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4(1), 273-286.
- 안민석, 홍덕기(2019). **스포츠인권백서: 언론보도를 통해 본 스포츠 반(反)인권 사례 모음.** 국회의원 안민석 의원실 정책자료집.
- 양기호(2000). 한국시민단체의 정치적 기능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10(2), 61-77.
- 양현묘(2002). 한국 NGO 의사결정과정의 특징과 한계: 경실련과 참여연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6(1), 121-144.
- 연합뉴스(2016.11.07.). 체육인 시국선언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
- 윤영진(2008). 정책과정에의 NGO의 참여: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27(2), 65-87.
- 이경렬(2020). **지역체육 발전을 위한 지역체육 기획자의 역할:** 스포츠사회학, 사회를 만나다: 스포츠를 다루는 지식의 사회적 확장. 2020년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18-27.
- 임용석, 홍덕기(2021). **엘리트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방안 탐색.**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6(3), 57-76.
- 정용철(2018). **Me와 Too사이에서 체육계 미투는 왜 번지지 않을까를 묻다.** 체육계 성폭력 문제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
- 정준영(2009). **스포츠 인권 향상을 위한 현장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 국가인권위원회. 33-43.
- 참여연대(2014). **감시자를 감시한다.** 고장 난 나라의 감시자 참여연대를 말하다. 서울: 이매진.
- 한겨례(2007.03.13.). 체대 교수·학생회 “폭력 뿌리 뽑겠다.”
- 한국경제(2021.04.07.). 쌍둥이 자매 ‘법적 대응 예고’...체육시민연대 “2차 가해 멈춰라.”

- 한승백(2010).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공론장을 통해 나타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3(1), 121-138.
- 홍덕기, 류태호(2007). 인권으로 바라본 학생선수: 교육적 담론.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4(4), 131-154.
- 홍덕기(2017). 나의 삶과 교육, 그리고 학문: 재미한 인 체육교육 전공 초임교수의 학문적 정체성 형성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한국체육학회지**, 56(2), 225-241.
- 홍덕기(2020).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문 분석을 통한 한국사회 스포츠패러다임의 방향 설정과 과제. **한국체육학회지**, 59(2), 285-302.
- 홍덕기(2021). 스포츠 인권 정책분석을 통한 인권 침해 원인과 향후 과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4(1), 24-52.
- Burawoy, M. (2005). Rejoinder: Toward a critical public sociology. *Critical Sociology*, 31(3), 379-390.
- Dillon, M. (2014).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theory: Theories, concepts, and their applicability to the twenty-first century*. 2<sup>nd</sup> ed. Malden, MA: Wiley.
- Le Monde(2015.03.04.). “더 이상 광란의 스펙타클 은 없어야.” 르몽드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3>
- Lim, S., Love, A., & Lim, H. (2015). Minseok Ahn and public sociology of sport, *Quest*, 67(1), 30-43.
- Nam, B. H., Hong, D., Marshall, R. C., & Hong, J. H. (2018). Rethinking social activism regarding human rights for student-athletes in South Korea. *Sport in Society*, 21 (11), 1831-1849.
- NEWSIS(2021. 06. 24). 6.25 아픔 간직한 노근리, 끝나지 않은 진실 찾기.
- Nussbaum, M. C. (1992). Human functioning and social justice. *Political theory*, 20(2), 202-246.
- OSEN(2007.08.02.). 체육시민연대-선수협, “3일 동대문운동장 수호 캠페인.”
- Thayer-Bacon, B. (2008). *Beyond liberal democracy in schools: The power of pluralism*.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Yin, R. K. (2014).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5<sup>th</sup> ed. Thousand Oaks, CA: Sage.